

# 테마북 Thema Book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빈을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이를 양극과 원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학생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단결되고 열린 상황임에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가 무엇이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통해 더 바뀌어 버린 외관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위원회기는 2001년 부채상환으로 IMF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실정인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는 단지 '외환지불능력'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체제와 전혀 다른 97년 체제를 맞이했다는, 이데 87년 체제의 특징은 외환위기를

은 '97년 제재를 잊어놓았다. 이제 87년 제재의 핵심을 의문외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열렬만이 남아 있다.

1987년 이후 헌법정수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러 커져서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적 성격은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그 반쪽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최후회기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시장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장악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켰고 87년 제약을 통해서 연

권력은 이미 식장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장군적으로, 형식적으로 밀려났다. 이를 황국화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6월 전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알았고요 했던 상황일까요?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민이었으며 국민의 생명양식과

이러한 상황이 6월 1일과 7, 8, 9월 50개교 대우생을 통해 국민들이 얻었고요 했던 상황일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고민이었으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본래로 뒤바꿔버린 최후의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2001년 부채상환으로 IMF 공약을 선언했다고 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실정인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단지 '외환자를 놓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제세·원화 다른 '97년 제세'를 점어냈다고, 이제 88년 제세의 뒷날은 외환회기를 거치어서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이 비본질적인 특징만 띠어 갔다.

1987년 이후 분임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적 성격은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그 반쪽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의원외기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사칭하고, 하급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살생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켰고 87년 해제를 통해서 만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면을 잘 조수만이 지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이를 탈권과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6월 첫째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단결하고자 했던 상황임과 이에 대항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민이었으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통해 지어워버린 외환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위원회기는 2001년 부채실태조사 IMF 증진을 실현했다고 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중요시되는 그런 실정의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는 단지 '외환지불 능력'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제재<sup>2)</sup>와 전혀 다른 '97년 제재'를 겪어놓았다. 이제 87년 제재의 특징은 외환위기를

thema 2008.10.26

#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면과 MB노믹스의 역주행

시, 현재 의원 보충선거 2007의 달리를 넘어섰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원회기는 단지 '의원직을 놓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제재를 가한 뒤 97년 제재를 잊어놓았다. 이제 87년 제재의 특성은 의원회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다.

1947년 이후 분단정국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화성의 정치권력의 특권적 성격은 완고되었다. 그렇다고 그 법정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도 아니었다. 1997년 회합시키는 정치가 내놓은 권력의 대부분을 서장호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가들이 상징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키고 87년 재회를 통해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저명한 경제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참할 정도로, 힘lessly 밀려났다. 이를 황금과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밀려났다. 이를 양극과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5월 한강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면을 이 만들었으나 쟁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항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민이었으며 국민의 생計향성과 삶의 구조를 동시에 담아내며만 완결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

한편은 이미 서쪽으로 밀려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작용하는 사실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피압박적으로, 형식적으로 밀려났다. 이를 양극화 현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이 6월 전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고자 했던 상황일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국민이었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삶의 구조를 동요로 터라버리던 '위험하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

이 위원회기는 2001년 부제살판으로 IMF 종임을 선언했다고 해서, 현재 의원 보궐기가 2003년 달리를 넘어섰다고 해서 논의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원회기는 단지 '의회정부를 늘려'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 즉 87년 제헌과 전혀 다

은 '97년 제례'를 실시하였다. 이제 87년 제례의 특성은 위원회기능을 지니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재적이고 비논리적인 영향력만 남아 있다.

1987년 이후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적 성격은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그 민권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위원회기능

정치가 내놓은 권력은 커리커 대부분을 시켰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  
기업이 상정하는 경제관념으로 잡았었고 87년 해를 통해서 먼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거북문운동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  
합당적으로 일시적으로 버렸습니다. 이를 양극화, 원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 유래 했었다.

1.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the key components of the system. This includes understanding the hardware, software, and data involved. For example, in a web application, this might involve identifying the server, database, and user interface.

후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과업이었으며 국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구조를 통해 더 치매병미인 위험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회원회기는 2001년 부세실원으로 IMF 회담을 전연했다고 해서, 현재 회원 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종료되는 그런 실정인 것이다 하니까, 회원회기는 단지 '회원권을 놓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문화, 교육, 87년 제헌절 '선언' 20년 '70년' 재해 등을 접어들었다. 이제 87년 제헌절 특집은 회원회기를 거지마당 우리 사회에서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열광적인 낱아 있다.

1987년 이후 분업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정치권력의 특권적 성격은 완화된바 있다. 그렇다고 그 반대의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1997년 최후권위는 정치가 대하는 권력의 대부분을 시장으로, 외국 금융자본과 재벌 대기업이 장악하는 경제권력으로 집중시키고 87년 체제를 통해서 민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자본운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참할 정도로, 임시적으로 밀려났다. 이를 탈락과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미 후에 일이다.

어려운 상황이 6월 정례회 7.8.9월 노동쟁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었고 했던 상황인가?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1987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과업이었으며 국민의 생활향진과 삶의 구조를 통해서 바뀌워미린 외환위기가 본래한다는 사실을 기

실에서 국민들 중 소수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부분은 비  
정규직으로, 임시직으로 버립니다. 이를 양극화, 편성이라고 부르기  
서 과학 것도 이미 오랜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테마북⑤]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면과 MB노믹스의 역주행

발행 | 2008년 10월 26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우 121-840)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인터넷 사이트 | <http://saesayon.org>

이메일 | [media@saesayon.org](mailto:media@saesayon.org)

책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북⑤]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국면과 MB노믹스의 역주행

## 전체 목차

- ◆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5
  - 1.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미국 금융
  - 2. 첫 번째 문제, 부실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3. 두 번째 문제, 수술비 7,000억 달러면 족한가?
  - 4. 세 번째 문제, 근본적인 금융규제 대책은 어디 있는가?
  - 5. 실물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 6. 하이에나와 장의사들의 시대
- ◆ 금융자본에 볼모로 잡힌 미국 시민들.....16
  - 1. 금융회사를 위한 구제금융과 국민의 파산
  - 2. 금융위기에 실물경기 침체까지, 집 잃고 직장 잃고
  - 3. 금융화로 심각해진 양극화
  - 4.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있나
- ◆ 망가진 미국 금융과 ‘금산분리 완화’ 발표한 정부.....24
  - 1. 금융위기 해법,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
  - 2. 교통경찰의 태만과 운전과실 때문에 금융대란이 발생했다?
  - 3. 미국 금융 고속도로에는 신호등도, 보안관도 없었다
  - 4. 신자유주의 금융 엔진의 과열과 폭발
  - 5. ‘규제’가 없다면 ‘구제’도 없어야 하지 않나
  - 6. 정부가 뚫어준 고속도로, 무슨 차로 달리지 고민하는 삼성
  - 7. 초보 운전자가 엔진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몰면?
- ◆ 금융위기 대응, 미국 따라해 될 일이 아니다.....34
  - 1. 강만수 장관의 워싱턴 현장체험 효과
  - 2. ‘시장 자기조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 강만수 장관
  - 3. 외부 금융 충격을 완충할 시스템 구축이 절실
  - 4. 내수기반 붕괴 막는 ‘선제적 대응’만이 살 길
  - 5.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 6. 보수여 가치체계를 뜯어 고쳐라

# 미국 경제, 7천억 응급치료로 살아날까?

---

2008.10.6 | 새사연 연구센터 | bkkim21kr@saesayon.org

---

## 목 차

1.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미국 금융
2. 첫 번째 문제, 부실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 두 번째 문제, 수술비 7,000억 달러면 족한가?
4. 세 번째 문제, 근본적인 금융규제 대책은 어디 있는가?
5. 실물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6. 하이에나와 장의사들의 시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saesayon.org>

##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미국 금융

“경제의 동맥이 막혔다. 이제 심장마비가 올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벤 버냉키가 구제금융(Bailout)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의회에서 한 발언이다. 의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기법을 동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29년 대공황 전문가였던 버냉키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백년 전통의 투자은행들이 연이어 간판을 내리고 금융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었던 지난 9월은 미국 경제사에 유례가 없던 한 달이었다.

[표1]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주요 일지

|        |                                                                                      |
|--------|--------------------------------------------------------------------------------------|
| 9월 7일  | 정부보증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결정                                         |
| 9월 14일 |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
| 9월 14일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를 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                                                |
| 9월 16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AIG에 850억 달러 자금투입 지분 79.9% 인수                                     |
| 9월 18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매도 잠정 금지<br>각국 중앙은행 대규모 유동성 공급                                     |
| 9월 19일 | 102년 역사의 미국 저축은행 아메리뱅크 파산<br>로이드 TSB 그룹,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인 할리팩스뱅크오브스코틀랜드(HBOS) 인수하기로 결정. |
| 9월 20일 | 헨리폴슨 재무장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의회 승인 요청                                                |
| 9월 21일 |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은행지주회사 전환신청                                                |
| 9월 25일 | JP모건 체이스, 미국 최대 저축대부조합인 워싱턴 뮤추얼(WM)를 19억 달러에 인수                                      |
| 9월 29일 | 미국 하원 구제금융 법안 부결(찬성 205, 반대 228)                                                     |
| 9월 29일 | 영국정부, 모기지은행 브래드포드앤드빙글리(B&B) 국유화 결정                                                   |
| 10월 1일 | 미국 상원 구제금융법안 수정안 의결(찬성 74, 반대 25)                                                    |
| 10월 3일 | 미국 하원 구제금융법안 의결(찬성 263, 반대 171)<br>부시대통령 법안 서명, 뉴욕증시 여전히 하락(157포인트 하락)               |
| 10월 4일 |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정상 금융위기 공조, 공동기금 조성 합의는 실패.                                 |
| 10월 5일 | 미국 6위 상업은행인 와코비아 인수를 둘러싸고 웰스파고와 씨티그룹 분쟁                                              |

미국 신자유주의의 심장인 월가 금융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최후의 대책으로 7,000억 달러의 세금을 월가의 부실자산에 투입한다는

금융위기의 장본인 금융회사 구제에  
분노한 미국 국민들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월가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벌은 없이 구제방안만 담겨있던 재무부의 법안에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심장마비 직전의 금융시스템에 산소 호흡기를 대는 응급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

[표2] 부시대통령이 10월 3일 최종 서명한 부실자산 인수 법안 주요 내용

\* 표시 항목은 부결이후 수정, 추가된 사항

|         |                                                                                                                                             |
|---------|---------------------------------------------------------------------------------------------------------------------------------------------|
| 인수 자금   | 7,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 증권.<br>* 즉각적으로 2,500억 달러 집행, 대통령 승인아래 1,000억 달러 추가 집행, 의회승인을 거쳐 3,500억 달러 추가 집행.                                |
| 인수 대상   | 2008년 9월 17일 이전에 발행된 주택담보 모기지 증권 즉 MBS 증권, 기타 필요한 경우 대상 확대.                                                                                 |
| 인수 기간   | * 2009년 12월 31일(연장 가능)                                                                                                                      |
| 인수 주체   | 미국 재무부                                                                                                                                      |
| 재무부 권한  | 부실채권 매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 보유.                                                                                                          |
| 인수방식    |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모기지 부실채권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 즉 최저가 매입.<br>“단순히 부실채권을 역경매 하는 방식으로 사들이는 것보다도 더욱 의욕적인 방안이 담겨있다”(폴슨 장관이 하원 통과 후 한 발언) |
| 인수기업 통제 | * 자산 인수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진 스톡옵션과 연봉 제한, 부실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해당 기업 주식 매입권 확보, 단 의결권 없음 .                                                                |
| 미국인 혜택  |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자 예금 보호 한도를 개인당 현행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br>* 주택 보유자들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하는 등, 세금 1,490억 달러 감면조치 포함.                  |
| 후속 대책   | 부실자산 인수 대상, 자산 평가, 매입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조치 마련.<br>10월 29일 기준금리 현행 2.0%에서 0.75%p 추가 인하 가능성.                                                       |

폭스 비즈니스 닷컴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4퍼센트가 구제금융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표를 주겠다고 답한 국민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미국 국민들이 쇄도했다. 11월 4일 대선과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미국 정치인들은 결국 9월 29일 투표에서 구제금융 법안을 찬성 205표, 반대 228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월가 금융시스템  
헨리 폴슨이 집도할 대수술.

부랴부랴 성난 미국 국민을 위한 민심 수습책을 몇 가지 끼워 넣고 이례적으로 상원투표를 먼저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안 발의 13일 만에 ‘2008 긴급경제 안정화 법령(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라 명명된 451쪽 분량의 구제금융법안은 10월 3일 하원을 통과했고 그날로 부시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다. 심장마비 직전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온 미국 금융시스템이 간신히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된 순간이다.

### 첫 번째 문제, 부실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과 실러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거들어서 월가의 금융시스템을 중환자실로 이송시켰을 뿐이다. 이제 7,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술비 사용을 허락받고 거의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헨리 폴슨의 집도 아래 진행될 대수술이 남아 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대수술은 바로 부실자산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부실자산인가, 도려낼 환부를 얼마나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얼마나 걸릴 지 모를 수술기간 동안 다른 부위가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술비는 7,000억 달러면 충분한가, 결정적으로는 이번 종양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인 투자은행, 그 중에서도 으뜸인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출신인 헨리 폴슨 장관이 과연 집도를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던 초대형 외과수술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명의를 불행하게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월가 플레이어들 자신들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법안이 하원에 통과된 지난 3일에도 뉴욕 다우지수는 종가기준 1.5퍼센트(157포인트) 하락한 10,325



부실자산의 규모 평가조차 쉽지 않아  
몇 개 대형 회사 자산평가에만 몇 개월 걸릴 판

로 마감했다. 불안한 그림자는 여전히 월가를 떠나지 않았다.

우선, 수술해야 할 환부를 판단하는 것조차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재무부가 국채를 동원하여 인수할 부실자산을 평가하고 인수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실자산이라는 게 뭔가. 설계한 사람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악명 높은 파생상품들이 아닌가. 우량 모기지부터 불량 모기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약 6조 달러 가량의 MBS 증권들과, 이걸 다시 섞어서 만든 2조 달러 이상의 1차 CDO 증권과 2차 CDO 증권들 그리고 이들 파생상품에 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인 62조 달러 규모의 각종 CDS 상품들 가운데 부실자산 여부를 가려내고 적절한 매입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그뿐이라. 이들 파생상품은 한 두 개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의 금융회사들이 자기 자금의 수십 배를 서로 차입(leverage)하여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지 몇 개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자산평가만 해도 수개월이 걸릴 판이다. 자칫 잘못된 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유사한 유형의 자산들이 시장에서 턱없이 높게 가치가 매겨지거나 반대로 되면서 전체 부실자산 크기가 요동을 치며 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재무부가 자산평가를 하고 있는 시간에도 월가의 시세는 멈추지 않는다. 신용 경색은 계속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며 그 때마다 부실자산 규모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사적 기업이면서 공적 기관행세를 했던 신용평가기관들인 무디스, S&P, 피치 등은 이번 금융위기의 공범들이니 이들에게 평가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알려진 바로는 재무부가 5~10개 정도의 자산평가회사와 계약을 맺고 여기에 법률과 금융, 회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세부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곧 자세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재무부가 가능한 빨리 부실자산을 사들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복잡한 작업인 만큼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며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말 몇 주만 지나면 해결되기는 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문제, 수술비 7,000억 달러면 족한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번째 문제, 즉 7,000억 달러가 과연 수술비로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베어스턴스 구제에 300억 달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 달러, AIG에 850억 달러 투입이 결정되었고 추가로 7,000억 달러 지불을 의회로부터 약속받았지만 누구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애초에 부실자산 규모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월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Systemic Banking Crises : A New Database”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의 세계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은행위기를 해결하는 데 평균 53개월, 즉 4년 이상이 걸렸으며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실질 GDP도 약 20퍼센트 이상 추락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14조 달러인 미국 GDP의 10퍼센트가 투입된다고 예상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을 훨씬 뛰어넘는 1조 4,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더구나 IMF의 분석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유추한 것일 뿐이다. 현재의 위기는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할지 알 수 없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도 지난 10월 1일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부실자산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저 2조 달러이고, 7조 달러까지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매일매일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7,000억 달러 규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세 번째 문제, 근본적인 금융규제 대책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점은 세 번째 문제인데, 이들 금융회사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주면 이들이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는 이 같은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예정하고 있는 외

과적 대수술이란, 금융이라는 순환기 계통의 악성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살려놓고 보자는 일종의 심장 소생술이라고 할만하다. 미국 정부당국자들도 인정하듯이 당장 살려놓는 것이 급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금융 재편은 손도 쓰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미국 정가와 학계에서 차제에 규제 풀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감독체제, 투명한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되는 이번 구제금융 법안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현재의 추세로 보자면 일차적 충격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대형 상업은행들에게 부실 투자은행이나 모기지 업체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박영철 교수의 지적처럼 부실이 상업은행으로 확장되는 것이며, “미국의 지역은행 300개 중 100개의 파산이 시간문제라고 하는 등 금융부실이 투자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장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진정한 금융위기 수습책이라고 봐야 할 금융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대책은 어느 세월에 나올 수 있을까. 11월 4일 대선이 끝난 후에 수술팀이 교체되면 근본적인 치유책이 준비될 수 있을까. 당장 금지했던 공매도 규제를 3일 법안통과와 함께 해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실물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되어, 이후 1년이 훨씬 넘게 금융 전반의 부실과 파국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부위들은 멀쩡했을까.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실핏줄이 터지고 동맥이 경화되고 심장까지 증세가 전이되는 동안 미국 신자유주의라는 몸통 자체가 병들었다. 현재 중병 초입에

들어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구제금융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미국 경제의 몸통인 실물경제다.

미국 경제의 뼈대라고 해야 할 제조업들은 이미 실질적인 경기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에서 10월 1일 발표한 9월 제조업 지수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공장 주문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의 상징인 자동차 기업들도 9월 미국 내 매출이 26퍼센트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신용경색은 미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자금 조달 경로마저 원천봉쇄를 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회사채 발행시장과 기업어음시장(CP)도 얼어붙었고, 은행을 통한 기업 대출은 고사하고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자금마저 빼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등급이 양호한 비금융 회사채 발행건수도 지난 9월 105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톰슨로이터는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0억 달러에 비해 25퍼센트로 쪼그라든 것인데, 초우량 기업인 GE조차 신용경색 여파로 지난 1일 1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보통주 발행에 나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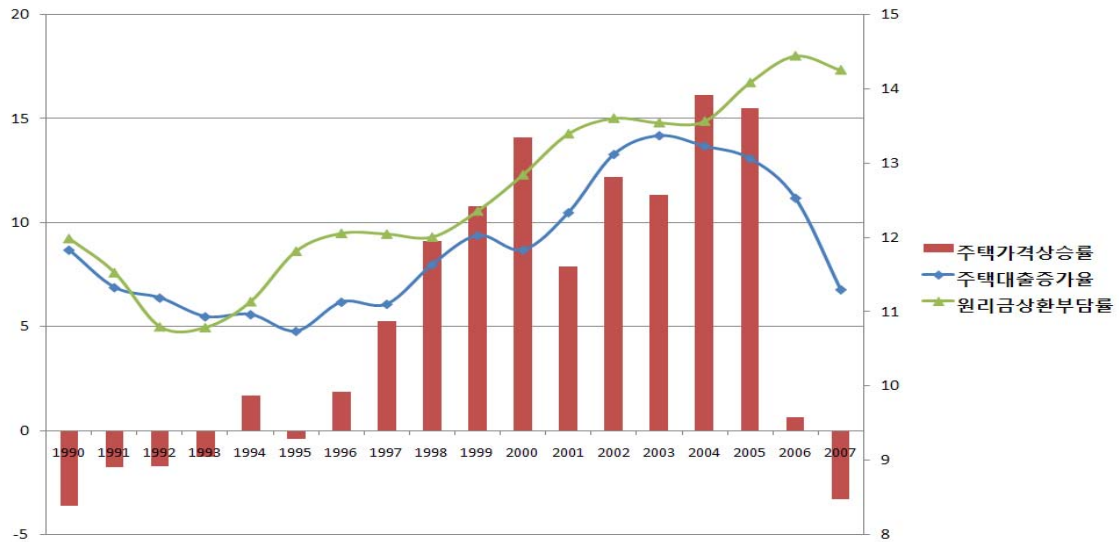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지난 5월부터 2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동성 경색으로 은행들 사이의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리보(Libor)금리는 9월 30일자로 6.87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말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한다고 해도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30년 동안 금융이라는 순환기 계통만 기형적으로 비대하게 키워온 신자유주의라는 질병이 지금 뼈대와 몸통까지 짓누르며 경제라는 몸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경기의 경우 진정되기는커녕 최근 더욱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는 ‘케이스 쉘러 20지수’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16.3퍼센트가 하락했다.

주택경기의 빠른 하락세  
공식 실업자 천만에 근접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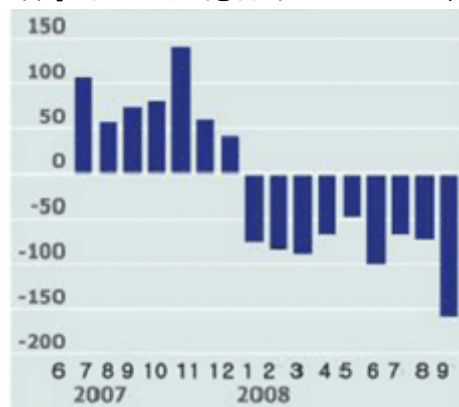
연도별 주택대출과 가격 상승률



\* 출처 : FRB(2008), Flow of Funds Accounts.

구제금융법이 통과되던 10월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5만 9,000개가 줄어들어 올해 9개월 동안 총 76만 개가 감소했다. 공식 실업자만 1,0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6.1퍼센트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2] 최근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 하락 추이



\* 출처 : BLS/ Haver Analytics

부실 기업 인수를 위한  
치열한 쟁탈장이 된 월가

이처럼 미국 경제 전체로 병이 전염되기 시작했지만 구제금융법안은 주택시장이나 실물경제 안정화와 관련된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직도 미국 경제는 응급실에 있다. 당장은 금융부실이 심각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물경제 부문은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여기에는 수술비가 추가로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도 없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서 순환기 종양을 도려낸 뒤 실물경제라는 몸통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다.

내심 미국 재무부는 금융부실 안정화 → 신용경색 완화 → 기업 자금조달 회복 → 기업경기 활성화 → 고용과 민간소비 회복이라는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순환기 응급조치만으로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타면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금융부실 수술만으로 끝난다면 미국경제는 향후 장기 입원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 하이에나와 장의사들의 시대

구제금융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미국 의회를 주시하고 있는 동안, 월가는 부실로 인해 먹잇감이 된 여섯 번째 규모의 와코비아 은행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월가의 금융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던 지난 9월 와코비아 은행 역시 부실에 몰려 인수자를 구하는 처지가 되었다. 자신도 상당한 모기지 부실을 안고 있던 씨티그룹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원 아래 와코비아의 은행부문을 21억 달러(주당 약 1달러)에 인수하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3일,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주당 7달러(인수가격 151억 달러)라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미국 정부지원도 필요 없이 와코비아 은행 전 부분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고 와코비아는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씨티그룹은 즉각 자신과 와코비아가 배타적 협상(exclusivity agreement)을 하기로 했으니 웰스파고와의 합의는 무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0월 4일 연방대법원이 나



숨죽이고 있던 사모펀드  
또 한 번 인수합병에 앞장설 수도

서서 씨티그룹이 와코비아의 배타적 협상자이니 법원의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씨티그룹과의 협상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비상명령을 내린 상태다.

와코비아를 둘러싼 씨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쟁탈전은 앞으로 월가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질지를 잘 암시해주고 있다. 화려했던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계속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와중에 생존한 금융회사들은 무너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문자 그대로 정글의 살풍경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로 봐서 미국 재무부의 7,000억 달러는 힘센 금융기업들이 인수합병 전쟁을 치를 실탄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 인수합병의 1/3을 차지하면서 월가의 떠오르는 스타였던 사모펀드들이 지금은 레버리지가 극도로 위축되어 숨죽이고 있지만, 월가의 고물상으로 자임하고 나서면서 인수합병을 주선하거나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외환위기로 초토화된 한국 금융시장에 소리 없이 들어와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그리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가로채서 구조조정을 한 뒤 비싸게 팔아버린 일이 본토인 미국에서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살아남은 투자은행들은 먹고 먹히는 인수합병 전쟁의 와중에서 자문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고자 할 수도 있다. 명성 높은 총잡이들과 보안관들이 모두 없어진 월가에 당분간 하이에나와 장의사들이 휘젓는 19세기 미국 서부개척시대가 펼쳐지리라 상상하는 것은 허황될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우리 정부가 월가의 고물상들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철없이 ‘월가 쇼팽’을 운운하며 부실한 금융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보겠다거나 미국의 고급 금융 인력을 스카웃하겠다고 기웃거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지난 30일, “미국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선제대응을 해나간 것이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현실감이 극히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 월가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아찔해 보인다.

# 금융자본에 볼모로 잡힌 미국 시민들

---

2008.10.10 | 새사연 연구센터 | bkkim21kr@saesayon.org

---

## 목 차

1. 금융회사를 위한 구제금융과 국민의 파산
2. 금융위기에 실물경기 침체까지, 집 잃고 직장 잃고
3. 금융화로 심각해진 양극화
4.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있나



<http://saesayon.org>



캘리포니아 주 모라토리엄 선언  
유동성 부족을 넘어 거래와 교환 중단

## 금융회사만을 위한 구제금융과 국민의 파산

요즘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미국 발 외신은 한마디로 상상초월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학교, 경찰, 소방서 공무원들에게 두 주째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배우로 알려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미 재무부에 7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긴급히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주를 세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 규모는 상위 8번째에 이른다. 한마디로 세계 8위의 국가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셈이다.

도대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도 이를 소화해야 하는 자본시장이 빙하기처럼 얼어붙어 있다. 또 발행하더라도 엄청난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혀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황’의 문턱을 넘어선 것과 다름없다. 금융회사 구제만으로도 정신이 없던 미국 정부가 드디어 일반기업 구제에까지 나섰다.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불신의 수준이 경제주체들 사이의 철저한 불신을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탓에 신용경색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랜만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단순한 유동성 부족을 넘어 거래와 교환이 막혀버린 난국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백악이 무효하고 오직 시간만이 약이라는 소리가 나올법하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미국 생활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상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미국 국민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정도와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업과 주택 차압에 내몰린 미국 국민들의 처지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는 극히 드물다.

지난 9월 20일, 최초로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이 발의되자 미국 국민들은 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만 구제해주고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법안통과를 격렬히 반대했다. 지역구

위기 주범인 금융회사 구제 대책만 있고  
미국 국민에 대한 대책 없어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반대투표를 요구할 정도였다. 말하자면 피해자의 돈을 뺏어 가해자를 구제해주는 셈이니, “월가에서 금융 위기를 자초했으니 월가 돈을 모아 구제금융에 쓰라”라는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겨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 1,49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을 법안에 끼워 넣었다.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 스톡옵션과 연봉을 제한하고 부실채권 매입 대신 해당 금융회사 주식 매입권을 확보한다는 ‘상당히 약한’ 제재 조항도 삽입했다.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아직 없다.

## 금융위기에 실물경기 침체까지, 집 잃고 직장 잃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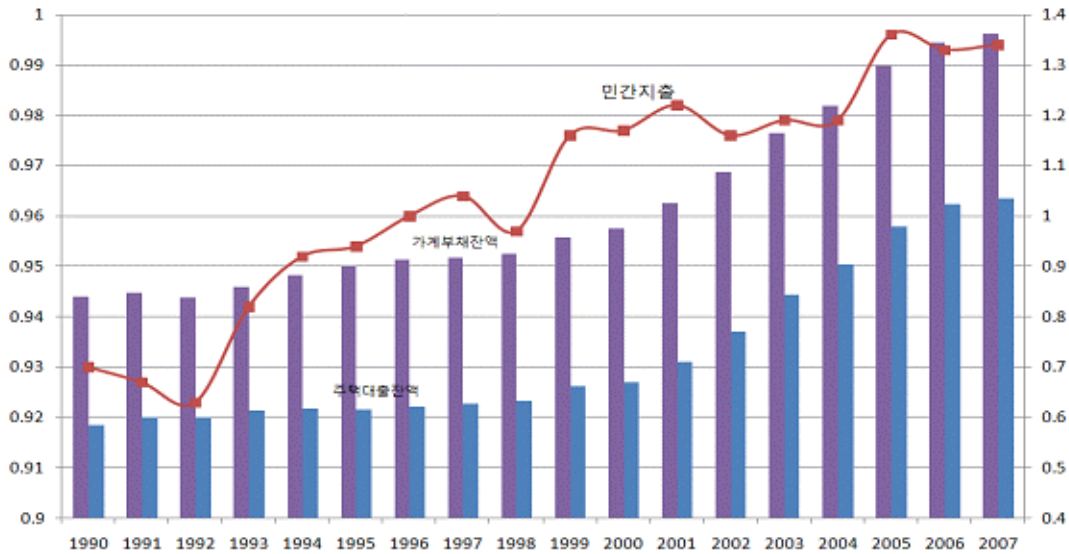
2006년까지 전 세계 금융자본이 모기지 업체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방출한 대출 금액은 약 11조 달러에 이른다. 특히 모기지 업체들은 이자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가격의 거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출을 무차별하게 시행했. 심지어 금융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약식 서류(Low doc) 대출이나 무서류(no doc) 대출이 행했다. 더 나아가 위장대출(liar doc)에서 소득도 수입도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닌자대출(Ninja : no income, no job, no asset)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대출이 거침없이 풀려나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3조 8,400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100퍼센트에 달하며, 미국 국민 가처분 소득의 136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그 결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7,500만 가구 중에서 무려 5,000만 가구가 모기지 대출로 집을 샀다. 즉, 5,000만 가구가 모기지 부실과 주택가격 폭락에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가구가 750만 가구, 그리고 현재 한달 이상 이자가 연체되었거나 차압된 가구가 자그마치 500만 가구를 넘어간다.

1,200만 명 집 팔아도 대출금 상환 못해  
실업자 940만 명으로 증가

[그림1]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출처 : FRB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미 1,200만 주택소유자는 당장 주택을 팔아도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할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실상 구매자가 없어서 집이 팔리지도 않는다. 지난 2년간 이 비율은 두 배씩 늘어났다. 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최소 10~20퍼센트 이상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1,200만을 훨씬 넘는 미국의 가정이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미국경제는 침체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일자리 감소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실업자가 무려 216만 명이나 늘어나 현재 공식적인 실업자 신세에 빠진 사람만 940만 명이나 되고 한계실업자와 임시취업자를 포함하는 실질실업률은 이미 10퍼센트를 넘어선 상태다.

그러다 보니 2007년 3월까지만 해도 4.4퍼센트였던 실업률이 줄곧 상승해 9월에는 6.1퍼센트에 이르렀다. 여기에 소비자물가까지 상승하기 시작했으니 미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실질소득 정체,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의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예금-대출-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투기-버블-소비의 취약한 버블경제로 전환

차압당한 집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며 한숨짓는 미국 서민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월가의 금융회사 직원들이 매일 흥흥한 소문에 귀 기울이며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광경들, 이미 일자리를 잃어버려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회의 땅 미국’의 현실이다.

### 금융화로 심각해진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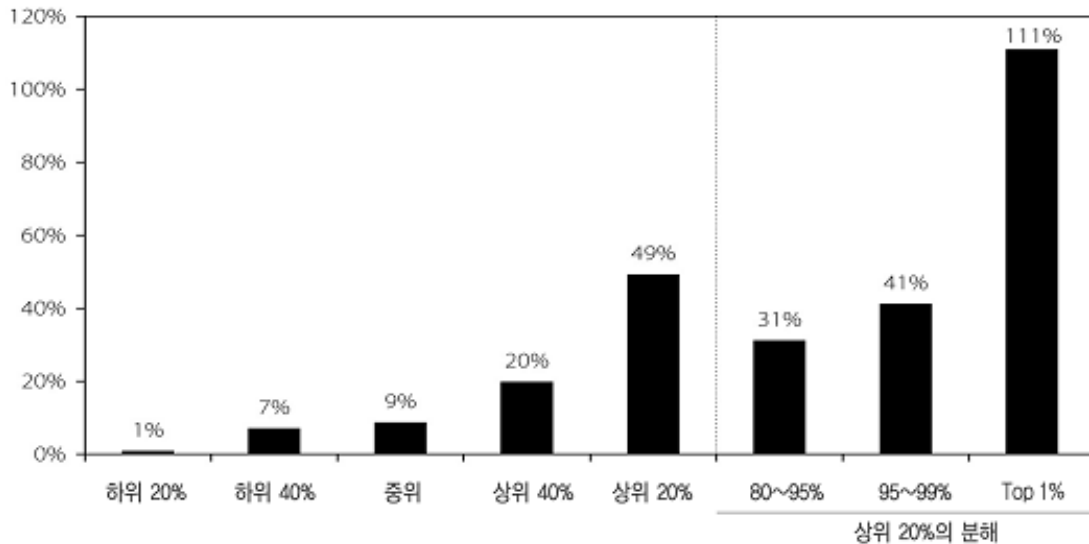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미국사회의 양극화와 서민들의 생활은 전성기였던 90년대에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금융의 발달로 인한 신용적 가수요 때문에 마치 소비여력이 있고 자산이 많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었을 뿐이다.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경제의 금융화로 인해 금융의 비중이 점점 커졌고 금융회사들은 전통적인 예대마진을 벗어나 고수익 투자에 집중한다. 이러다보니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려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예금-대출-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투기-버블-소비의 취약한 버블경제로 전환된 것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전체 기업의 수익 가운데 10퍼센트에 불과하던 금융부문의 수익은 2000년 기준 40퍼센트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시가 총액도 6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퍼센트에 불과하다.”(이코노미스트)

이 결과 미국에서도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하위 20퍼센트 계층의 실질소득은 1퍼센트 성장한 데 반해 상위 1퍼센트의 실질소득은 111퍼센트나 늘어났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 미국 중산층은 급격히 붕괴된다. 1970년에 58퍼센트에 달하던 중산층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41퍼센트로 하락한다. 잔인한 것은 이렇게 양극화로 인해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아 고통스러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약탈적인 대출행위를 자행하여 월가의 금융가가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하위 20% 실질소득 1% 증가, 상위 1%는 111% 증가  
저소득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로 성장한 월가

[그림2] 1979~2003년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출처 : EPI(2008)

대다수 미국민들에게 대출 부담이 켜워질 동안 금융회사들은 전체 기업 이익의 1/3을 차지할 만큼 성장을 구가했고 월가의 최고 펀드매니저들은 고급 주택과 요트를 구입하고 고급 호텔에서 여가를 즐겼다. 2006년 기준 헤지펀드 매니저 상위 25명의 평균 보수는 무려 5억 7,000만 달러로, 이들 소득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140억 달러에 달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연봉 5,000만 원 이하일 때 이들은 웬만한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훨씬 넘는 6,000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과 금융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이들 초고액 연봉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서민들이었다. 주택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연체, 압류, 가계 파산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계층이 바로 자산과 소득이 부족했던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아니었던가. 소득과 고용에 기초하지 않은,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은 절대 지속될 수 없으며 거품이 꺼지면 제일 먼저 중하위 소득의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미국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 관련 정부 요직을 장악한 월가 출신들  
미국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월가의 정부

##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있나

카지노에도 나름대로 룰이 있고 자연의 정글에도 법칙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융자본주의라는 정글은 자연의 정글을 초월하는 자본 특유의 과욕과 잔혹함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대다수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을 향한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어쩌면 이는 너무 당연할 수 있다. 지금 미국 정부의 경제 관련 요직은 대부분 월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월가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 대다수 국민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재무장관 헨리 폴슨도 월가 1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앞으로 구제금융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국 책임자인 35살의 닐 캐쉬카리 역시 전 골드만삭스 이사가 아니던가. 게다가 이들과 구제금융 투입계획을 세우게 될 자산운용사들도 온통 월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월가의 정부이지 국민의 정부가 아닌 셈이다. 이들이 과연 이번 금융 위기의 뇌관이라고 할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투자은행에 규제의 족쇄를 채울 수 있을까. 정부 관리와 월가는 부실에 빠진 대형 금융회사들을 먼저 살려야 미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대마불사’를 밀어붙일 것이 뻔하다.

이제 월가의 금융 부실은 차고 넘쳐서 실물경제로 흘러들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미국민들만 불모로 잡았으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지만,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미국 발 태풍에 휩쓸려가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수적 애국주의로 똘똘 뭉쳤던 미국민들, 그래서 결국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는 데 찬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월가와 그에 유착된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긴 우리도 월가에 희생되고 있는 미국민을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환

대기업과 강남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대처 없어

을 폭등과 주가 폭락, 금리 폭등으로 한국의 개미투자자들도 올해 이미 주식 투자로 60조 원 이상, 펀드 투자로 40조 원 이상을 날렸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파산의 끝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 정부와 다름없이 대기업과 강남 부유층을 위한 감세에만 관심이 두고 있지 않은가. 무너져 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하건만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을 완화하라는 독촉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연일 치솟는 환율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금융 위기와 환율 폭등이 저지해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





# 망가진 미국 금융과 ‘금산분리 완화’ 발표한 정부

2008.10.14 | 새사연 연구센터 | bkkim21kr@saesayon.org

## 목 차

1. 금융위기 해법,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
2. 교통경찰의 태만과 운전과실 때문에 금융대란이 발생했다?
3. 미국 금융 고속도로에는 신호등도, 보안관도 없었다
4. 신자유주의 금융 엔진의 과열과 폭발
5. ‘규제’가 없다면 ‘구제’도 없어야 하지 않나
6. 정부가 뚫어준 고속도로, 무슨 차로 달리지 고민하는 삼성
7. 초보 운전자가 엔진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몰면?



<http://saesayon.org>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  
달러 무제한 공급 선언

## 금융위기 해법, 달러 무제한 공급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

미국을 필두로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가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고자 선진 각국들이 자국에 필요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에서 7,000억 달러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직접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는 부실은행 국유화 방침을 내놓는가 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정부가 예금자의 예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조용하기만 했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나 시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들 대책의 효과는 반감되었고, 이미 금융 위기는 개별 국가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통제를 넘어, 개방된 금융 연쇄고리를 타고 전 세계로 급격히 전이되었고, 이제는 문자 그대로 지구적 범위의 해법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다.

지난 10월 8일, 오랜만에 주요 선진 7개국(G7) 중앙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는 ‘공조’를 취했지만 그 효과 역시 하루를 가지 못했다. 그러자 10월 10일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담, 11일 우리나라와 BRICs 등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 회담, 12일 유로존 15개국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금융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실자산 인수를 넘어 금융회사에 직접 자금투입을 하는 방안,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 등의 강력한 국가 개입 대책이 쏟아져 나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사실상 국가자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더니 13일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달러 무제한 공급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심장이 멎어버린 상태를 한시도 지연시킬 수 없어 일시적인 전기충격요법을 사용해야 할 국면에 이른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지나치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

## 교통경찰의 태만과 운전과실 때문에 금융대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기충격요법으로 이미 실물경제에까지 전이된 세계 경제 위기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여전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금융규제 완화 논쟁의 초점이었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미루고 미룬 끝에 13일 전격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정책 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돼 전 세계 금융공황 국면으로 치달은 최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교통사고(금융 위기)의 원인이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운전 과실(경영자의 모럴헤저드)이나 잘못된 교통신호체계(감독시스템), 또는 과속을 막지 못한 교통경찰(감독기관)의 책임일 수도 있다.” (<아시아투데이> 10월 10일)

금융정책 당국의 수장다운 대단히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광우 위원장 발언의 취지는 ‘금융자본주의 그 자체나 규제 시스템이 문제라기 보다는 감독 소홀이나 금융회사의 과욕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나라는 향후에 ‘금융산업 혁신을 그대로 강행하고 규제 완화의 큰 틀을 유지’ 하면서 금융감독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접촉사고도 아니고, 전 세계가 무제한 달러 공급을 해야 하는 ‘전 국가적 교통마비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 지금의 금융 위기가 과연 교통경찰의 근무 태만과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미국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30년 동안 부실 위험성을 누적시켜 왔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전광우 위원장 발언의 타당성을 가려보자.

전통 제조업 투자를 선호했던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위렌 버핏은 이번 세계 금융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Nobody knows who is doing what)’ 에 지나치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 한 월가의 위험 통제기능 상실에 금융 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파생상품이라는 시한폭탄 결합과  
레버리지라는 급가속 결합

## 미국 금융 고속도로에는 신호등도, 보안관도 없었다

1980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금융시스템 엔진에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대량 살상무기’ 수준의 위험성이 있는 파생상품, ‘시한폭탄 결합’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투자자와 기업의 자금중개 수수료를 넘어서 자기자본의 몇 십 배의 차입(leverage)까지 동원해서라도 고수익을 좇으려는 ‘급가속 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정책 결정자들은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근본 결합을 고치려 하거나 문제발생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사전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반대로 “파생상품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그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수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2003년)이라며 시장이 위험성을 자율적으로 정화시킬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금융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오히려 풀어버렸고, 금융회사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규제도 피해나갔다. 1929년 대공황의 교훈을 근간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엄격한 분리를 규정했던 은행법(Glass-Steagall Act)은 1999년 은행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으로 대체되면서, 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장벽이 사라졌다.

이들 금융지주회사와 투자은행들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전문회사와 모기지 전문회사를 세워, 이제는 악명이 높아진 서브프라임 대출을 남발했다. 특히 투자은행들은 상업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과다차입 등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고, 미국 증권선물거래소(SEC)로부터도 그 어떤 강제적이고 명시적인 규정도 받지 않아,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느슨하기 그지없는 규제 틀에서 마음껏 대규모 차입과 자기자본 투자를 감행했다.

더욱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생상품을 주업으로 하는 헤지펀드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라는 초고속 경주용 차마저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금융 고속도로를 폭주하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규제나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조차 없었다. 얼마나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든, 얼마나 과도한 차입을 동원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라고 하는 초고속 경주용 차가 과속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을 일삼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극히 ‘위험한 주행’을 해도 그들만 다치고 만다면 보안관은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드레일만 들이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명을 살상했으며 전체 교통마저 마비시키고야 말았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리라 믿었던 파생상품 그리고 점점 더 풀려나가는 규제 속에서 위험도 높은 파생상품과 모기지 대출을 자유롭게 일삼던 금융기관들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 금융 감독의 최종 보안관이라고 할 재무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월가 출신들이었고 시장주의 추종자들이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데다가,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와 친분이 두터운 이들 보안관에게 감독을 더 잘하라고 한들 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 신자유주의 금융 엔진의 과열과 폭발

그뿐이 아니다. 미국 금융상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해왔던 기관이 바로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 3대 신용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은 공적기관이 아니라 철저히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었다. 이들의 수익원은 바로 불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그 금융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투자은행들이다. 애당초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책임자들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제 94년 역사의 메릴린치를 파산시켰다는 오명을 안게 된 전 CEO 스탠리 오네일의 경우, 부채담보부증권(CDO)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한 임원들을 해고하면서까지 오로지 고수익을 추구했다.

월가 금융시스템 자체의 결함과  
그것을 방지하는 규제 결함

도대체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미국 서민 가구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어떻게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첨단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규제 풀린 월가의 전통적 금융회사들과 규제 없는 신종 금융조직들이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과 접목시켜, 고위험을 안은 채 고수익을 무제한 추구하면서 위험을 내부에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적되는 위험성은 ‘시장이 스스로 치유’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월가의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월가의 신념은 현실에서 여지없이 무너졌고 자유시장 금융시스템이라는 자동차 엔진은 과열로 폭발했다. 이번 금융 위기가 시장주의의 파산임을 고백한 파이낸셜타임즈 마틴 울프는 결국 지난 3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3월 14일 금요일을 기억하라. 자유시장 자본주의(global free-market capitalism)의 꿈이 사망한 날이다. 30년 동안 우리는 시장 주도의 금융 시스템(market-driven financial system)을 추구해왔다. 베어스 터스를 규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 통화정책 책임 기관이자 시장자율의 선전가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시대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제 월가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규제체계에도 결함이 있었으며 감독조차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월가의 금융가들과 펀드매니저들은 수익에 대한 극단적인 과욕을 멈추지 않았음이 증명된 것이다.

### ‘규제’ 가 없다면 ‘구제’ 도 없어야 하지 않나

지금 선불리 신자유주의 종언을 주장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라는 엔진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규제를 복원해야 한

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규제라는 것이 비용이 들지만 미리미리 규제했다면 이처럼 더 큰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장하준 교수, <이코노믹리뷰> 10월 9일)이라는 주장은 그런 점에서 매우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 자율규제의 신화를 철석같이 신봉했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조차도 “지금 세계의 금융시스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정비해야 한다. 금융시장, 금융산업이 자율규제를 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지금의 위기는 정부가 손을 놓고 아무 규제도 없이 방임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빛은 위기가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가 빛은 위기이다. ‘규제 자본주의 (regulated capitalism)’만이 해법”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를 피해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대신에, 저소득층에게 그만큼의 부채를 안겨주고 이들을 거리로 내몬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규제를 받지 않았던 만큼 규제도 스스로 하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다.

브레이크 없는 미국 금융자본주의 앞길에 미국 정부가 알아서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신호등마저 없애주고 보안관도 철수시킨 상황에서 교통대란과 대규모 인명 살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해 병원에 실려 간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금융회사라는 자동차 수리비에 쓰겠다니 누가 찬성을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세금을 쏟아 부어 상황을 수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최소한 수습 후 교통사고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11월 4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당분간 금융 혼란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 계속될 금융회사 파산이 한계점에 이르고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으로 돌입하면 각종 의회 청문회를 통해 제도적인 수습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굳이 미국 모델을 따라 하려거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정부, 금산분리 완화법 발표  
규제완화와 시장자유규제에 대한 무모한 신념

## 정부가 뚫어준 고속도로, 무슨 차로 달릴지 고민하는 삼성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미국 발 금융 위기로 몇 차례 미루어 왔던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방안을, 전 세계가 금융과국을 막고자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용감하게(?) 발표했다.

예고되었던 대로 금산분리 완화는 1)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산업자본이 종전 4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소유하도록 확대하고, 2) 종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도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며, 3) 해외에서 산업자본을 보유한 외국은행에게도 국내은행의 인수를 허용하고, 4)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증권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산하에 둘 수 있게 하며, 5) 보험지주회사도 자회사로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보너스로 재벌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돕기 위해 각종 제한 규정마저 최장 7년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6)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월가의 금융인들보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규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안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제 명동 한복판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셈이다. 그것도 어떤 차를 타고 갈지 골라야 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제조업 금융자회사 허용을 선택하여 그룹사를 재편할지,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로 갈지, 아니면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를 세울지 고민하면서 삼성이 가장 편한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엔진 구조에 결함있는 자동차로  
명동 한복판을 질주하겠다는 것

## 초보 운전자가 엔진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몰면?

결국 우리 정부는 여전히 끝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미국 발 금융 위기를 보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규제 체계 역시 금융산업의 고속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신호등 정도로 여겨서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얻은 교훈은 운전자 교육을 잘 시키고 경찰관을 세워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정도인 듯하다.

심지어 미국 금융 위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표식을 내기 위해서,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 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완화”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금융위원회 10월 13일 보도자료) 놀라운 해석이다. 지금 미국은 은행 부실로 인해 연방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어디서라도 자금을 동원하여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극단적인 처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마치 자동차 사고로 망가진 차를 어쩔 수 없이 도색하고 있는 미국을 흉내 낸다면, 우리는 방금 나온 신차인데도 자랑스럽게 새로 도색하는 것이 최신 유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할까.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이미 엔진 구조에 결함이 있다고 검증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도, 인파로 뒤덮여 있는 명동 대로에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다. 신호등도 모두 없애고 오직 교통경찰만 세워놓겠다는 것이다. 신호등도 없이 초고속으로 질주할 미국산 금융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성장동력임을 믿어달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미국산 금융시스템이 폭발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심해서 엔진을 과열시키지 않고 기술적으로 운전을 하면 엔진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굳세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금융시스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월가도 엔진 과열과 폭발을 막을 수 없었다. 하다못해 이제 막 면허시험에 통과한 한국에게 이런 자동차



월가의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다행

를 주고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아니면 아예 문제가 있는 엔진 결함을 근본적으로 고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그나마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을 덜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이) 월가의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셈이다. 일본의 경우도 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후 금융기법을 채택하지 않고 후퇴적인 경영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 규제 때문에 ‘촌놈’ 행세를 한 것이 맞았다.” (<이데일리> 10월 9일)

새시언  
saesayon.org

# 금융 위기 대응, 미국 따라해 될 일이 아니다

---

2008.10.23 | 새사연 연구센터 | bkkim21kr@saesayon.org

---

## 목 차

1. 강만수 장관의 워싱턴 현장체험 효과
2. '시장 자기조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 강만수 장관
3. 외부 금융 충격을 완충할 시스템 구축이 절실
4. 내수기반 붕괴 막는 '선제적 대응'만이 살 길
5.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6. 보수여 가치체계를 뜯어 고쳐라



<http://saesayon.org>

정부의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란?

## 강만수 장관의 워싱턴 현장 체험 효과

미국 금융 위기나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식선 이상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었다. 강 장관이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위기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현장체험의 결과가 10.19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이라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내친김에 부동산 거품 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대출규제를 사실상 풀어버리는 10.21 부동산 부양 정책까지 발표했다. 월가의 말투를 빌려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한(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다.

주요 내용은

- ①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은행의 대외채무를 총 1,000억 달러까지 3년간 지급보증하고(현재 국내은행 대외채무는 약 800억 달러),
- ②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 결정을 한 150억 달러 이외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300억 달러’를 직접 은행에 공급하며,
- ③ 원화 유동성마저 막혀버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환매조건부 채권(RP)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통해 원화를 공급하고,
- ④ 3년 이상 가입한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세제 지원’으로 일반 펀드가입자의 손실보전을 해주며,
- 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게 정부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 ‘1조 원 상당의 금액을 현물 출자’한다는 것이다.

주로 시장을 통해서 달러와 자금수급을 조절해왔던 이전의 방식과 비교해, 달러와 원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점은 워싱턴 방문 효

‘정부의 관리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조정능력’을 믿은 정부

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도 4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눈높이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 ‘시장 자기조정’에 대한 기대 못 버린 강만수 장관

사실 9월 접어들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황 국면으로 치달은 금융 파국을 막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동안에 한국의 쟁쟁한 보수 두뇌집단들은 첨단 금융시스템을 운영해온 미국이 이를 슬기롭게(?) 조기에 수습하리라고 믿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신해온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을 경험하고 그 이후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대응기법과 장치들을 만들어왔던 미국이 설마 이정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믿음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후진국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은 불투명하고 원시적인 대출을 마구잡이로 남발해 지금의 금융 위기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은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믿는 동안, 미국 정부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조정 능력’을 믿고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표면에 떠오르고 1년 가까이 미국이 한 것이라고는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오직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뿐이었다. 지난 3월 14일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텝스가 무너지자 뒤늦게 공적자금 3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시장에 개입했지만 그 때만 해도 “시장에 맡기고 간섭하지 말라”는 목소리에 눌러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연이은 메릴린치, AIG보험이 무너지는 걸 목격하면서 서둘러 7,000억 달러 구제금융법안을 내놓았지만 그 때는 이미 상황이 손쓸 수 없이 악화된 뒤였다. 미국 정부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보고서야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인정했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

다. 시장기능의 붕괴는 곧 미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상실로, 그리고 한국 정부와 보수세력의 예측 능력 상실로 전이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만수 장관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10·19금융안정화 대책들은 시점을 놓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위기 대응책을 다시 한발 늦게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미국과 유럽이 이미 은행의 부분 국유화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신용경색에 몰린 은행들의 어떤 자구책도 담보하지 않고 자금을 풀어주는가 하면, 감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발상이다. 미국도 버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우리 정부는 버리지 못한 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신자유주의적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시장)을 맹신하는 경향을 통박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 외부 금융충격을 완충할 시스템 구축이 절실

새사연은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가 극단적 신용경색과 금융공황으로, 그리고 한국의 외환 위기로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10퍼센트만 되어도 그 후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 최소 수년 이상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국자들의 표현대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조치”를 시급히 실행해야만 한다. 하나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외부의 금융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국민경제를 살릴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밑에서부터 붕괴되어가는

내수기반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 발 금융변동에 대한 어떤 완충기제도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폭락하면 바로 다음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폭증하고, 환율이 치솟는 일이 몇 달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마저 제한 없이 들어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외 자본 이동에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어 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기업들이 도대체 수출입 대금결제 시점을 잡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는 15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풀어서 환율 폭등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은 환투기 세력과 시장에 ‘호구 잡힌’ 모양새며, 외환보유고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급기야 외환 스왑시장 등에 150억 달러를 풀고 추가로 300억 달러를 은행에 직접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달러 거래는 막혀버렸다. 환율은 1,300선 밑으로 내려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동안에도 키코(KIKO)가입 수출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고, 수입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달러 송금은 멈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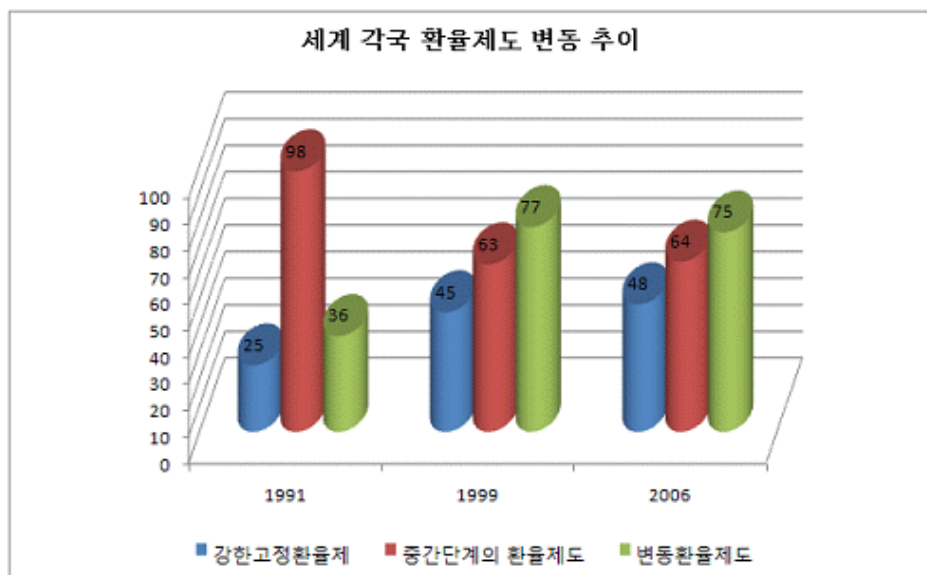
최근 외환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외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외환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제약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능동적으로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안정적인 조절기능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실 1998년에 입법되고 1999년에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시장이 자유화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뀐 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때문이지 내부적 여건 성숙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금융의 규모와 관리 능력이 우수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외환시장 자유화와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에 자금을 푸는 방식을 뛰어넘어  
충격을 완충시킬 ‘시스템적 기제’ 필수

당장 외국환거래법을 고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이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지금, 심각한 외부 금융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자금을 푸는 방식을 뛰어넘어 충격을 완충시킬 ‘시스템적 기제’는 필수적이다.

[그림1]



정부는 예를 들어 ① 칠레 등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는 외화가변예치제도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대해 일정한 지연 또는 예치를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완화하는 방안, ②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발동과 유사하게 일일 환율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로 묶어두는 조치를 일정 기간 시행하는 방식, ③ 그리고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재정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화하여 시스템 차원에서 외환 거래와 유출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 등을 다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환시장 자유화가 대세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여기에 역행한다고 망설일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모든 것이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것이 대세이고 어떤 것이 스탠더드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다. 아



외상이 미국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내상은 깊아가고 있어

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는 국면이 아닌가.

## 내수기반 붕괴 막는 '선제적 대응' 만이 살 길

세계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시급한 일이 외부 금융 충격을 완충시킬 시스템적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와 동시에 내수기반의 붕괴를 막고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해 내수경제를 중심으로 내성을 키우는 일이 급하다. 이는 향후 세계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마저 한 자리 수로 곤두박질 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달리 파생상품 부실도 미미하고 재무건전성도 좋아서 아직 위기국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기반 경제와 수출 대기업과 단기수익 추구에 몰두한 거대 금융기업들로 양분된 경제다. 이 두 경제는 사실상 별개의 세계를 형성해 상호가치사슬 체계가 끊어진 지 오래다.

우리의 경우 미국의 GM과 같은 대기업이나 메릴린치와 같은 금융회사가 부도에 몰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600만 자영업의 몰락과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는 11년 전 외환 위기를 능가하는 심각한 국면이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미국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내상은 이미 깊아가고 있었다.

새사연은 그 동안 미국 발 금융 위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한국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기반 붕괴를 집요하게 이슈화해 왔다.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매출실적에 타격을 입은 이들은 최근 금융 위기로 자금조달 길마저 완전히 막혀버린 데다가, 이미 대출받는 자금의 이자 부담도 치솟고 있어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은 현재 사채 이외에 자금조달 길이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니, 적어도 이들에게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도난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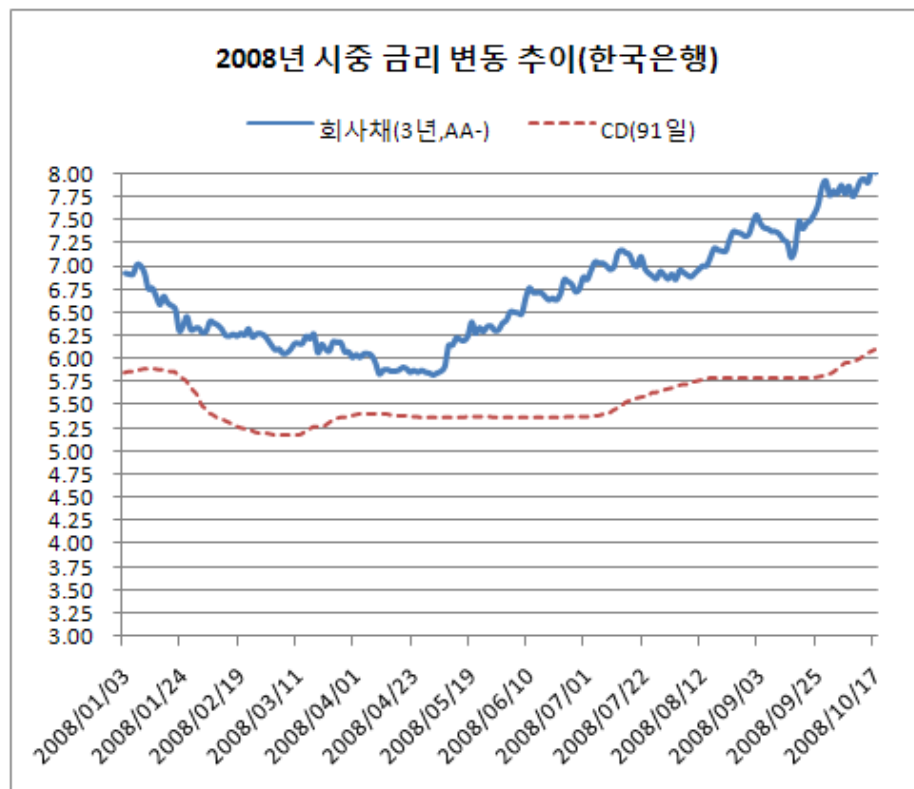
일반 시중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독려는  
사실상 ‘지원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나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던 정부가 10월 초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후선에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 기업은행에 1조 원 현물출자를 통해 자금을 확충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우리·신한 3개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신보의 보증서를 갖고 가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시중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 대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금지원으로 시중은행들만 좋은 일 해주는 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림2]



외부 금융충격을 완충시킬 시스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유일하게 국책은행으로 남아있는 기업은행이 그나마 대출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1조 원 자본 확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데다가, 대출 조건이나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추가조치가 없는 한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구제금융과 공적자금 투입은 거대 금융기관이나 재벌 대기업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정부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은행들에게 해외자산 매각, 대주주 배당금 지급 일시중지 등 강력한 상응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기업은행을 경유해서, 또는 특별 기금관리기구를 만들어 직접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동시에 자금 지원시 일반 시중금리가 아닌 이보다 훨씬 낮은 정책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갚아탈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외부 금융 충격이 이미 내부로 전달된 뒤에 은행 자금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 충격을 완충시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고, 동시에 자영업과 중소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공적자금 투입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위기국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정부가 절대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감세 조치, 부동산 거품 확대, 금융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1) 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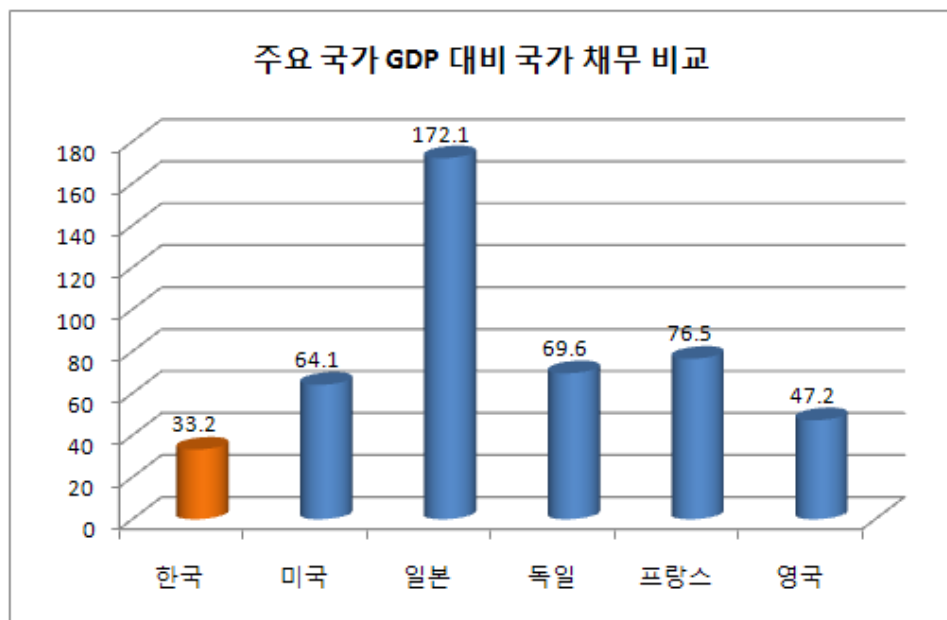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1일 법인세율을 5퍼센트 인하하여 약 9조 원의 세금

선부른 감세정책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을 감면하고 소득세 3조 6,000억, 재산세 5,000억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고, 현재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낮춘다고 개인소비나 설비투자가 당장 살아나기 어려운 시점... 선부른 감세정책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는 한번 낮춰주면 재인상이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매일경제, 2008.10.22)고 지적한 초교텐 국제통화연구원 이사장의 주장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황당한 것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집하면서도 동시에 최근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지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만수 장관은 “재정은 OECD 국가 중 건전하니까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수출 위축에 따른 것을 내수가 커버”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림3]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성장률이 3퍼센트 초반을 넘나들고, 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소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충분히 감안하

우리가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위기를 피한 것은  
LTV와 DTI를 통한 대출규제가 있었기 때문

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그 전제로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향후 장기적인 국면을 감안할 때, 감세를 안 하고도 현재 국가 채무 300조 원을 넘는 추가적인 적자재정 편성을 해야 할 상황조차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부동산거품 확대

지금의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미국 부동산 거품임을 모르는 이는 현재 없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상당하며, 현재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미 전국 아파트 미분양가구가 16만 채에 이르며 건설사들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 기준으로 14퍼센트를 넘어섰고, 시중은행들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고정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10퍼센트를 넘어서서 대출자들의 가계 부담도 위험해지고 있다. 거품이 급격히 빠지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미 었질러진 과잉공급과 대출 부담을 해소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고 투기를 부활시키려는 우려스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지로 하는 부동산 부양대책을 지난 8월 21일 내놓은 데 이어 종부세를 완화하더니 10월 21일에는 사실상 대출규제를 풀어버리는 투기지역 해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위기를 피하고 있는 것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해 대출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대출규제를 수도권 중심으로 풀어버려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현재의 고금리 상태가 대출규제 완화에 어떤 작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정 시점에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을 강행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할 시점에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선 아이러니

### 3) 금융규제 완화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유독 우리 정부만 지난 10월 13일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전격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미 파산한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을 모델로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모델이 사라져버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융규제 완화를 보류하라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정부는 ‘위기는 기회’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위기를 우리 금융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온다. 금융 선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파산한 투자은행 모델이었다. 잘못된 준비였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기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게만 기회인가. 다른 나라들은 기회가 아니라서 금융규제를 검토하는 것인가.

그래도 굳이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 선진화를 하고 싶다면 현재의 금융 혼란이 진정되고 여타 국가들에서 금융시스템이 재편되는 결과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개편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한국의 경쟁상대 투자은행의 형태와 기능의 윤곽이 잡히는 단계에서 제도 개편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박영철,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 2008.9.30). 이는 최소한 보수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 보수여 가치체계를 뜯어 고쳐라

조순 전 부총리는 10월 16일 “정부가 은행 주식을 반(半)국유화 하는 경천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책도 받아들여야

동지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등 지금 시기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며 “더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주가와 환율 변동에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도 경제사적으로 대변동의 시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의 우리 경제구조 변화를 보건데 경제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보수의 주장처럼 좌파정책을 펴왔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유주의 보수 경제노선 때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실제로는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상황을 악화시켰다.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할 시점에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선 우리 역사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지금 한가하게 좌우파 이데올로기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권의 지지기반을 챙기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수년 간 나라와 국민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는 11년 전의 외환위기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생존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가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낡은 가치체계를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상식에 닿는 일이다.

“보수여! 시장을 너무 믿지 마라. 시장을 믿으면 선제적 대응은 불가능하다.”